

동남아 4개국의 여성정책 개발수요에 관한 분석¹⁾

김은경,²⁾ 장은하,³⁾ 김정수,⁴⁾ 박서희⁵⁾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에 대한 담론
2. 우리나라의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정책

III. 4개국의 분야별 여성정책 수요 분석

1.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2.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3. 여성의 인권 (폭력방지 및 철폐)
4. 4개국의 여성정책 수요 분석 결과

IV. 4개국의 양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의 공유

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1)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2014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I-VI”의 연구 내용 중 여성정책 개발수요 발굴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학술지 형식에 맞추어 재집필 한 것임.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kekkekek@kwidimail.re.kr, 02-3156-7107)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ehchang@kwidimail.re.kr, 02-3156-7064)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ciel5817@kwidimail.re.kr, 02-3156-7171)

5)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flowers0920@naver.com)

제 I 장

제 II 장

섹
터

제 III 장

제 IV 장

초록(Abstract)

양성평등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독립적인 목표 중 하나이자,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원조 정책에 필수요소로 포함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남아 4개국의 여성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정책 원조 수요를 정치, 경제, 인권(폭력)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위해서 현지 기반의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현지 여성정책 관련 정치인, 정부 공무원, NGO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세미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4개국의 양성평등 정책 수요에 대한 연구결과를 개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별로 차별화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개발수요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인 개발 사업 사례들 또한 제시하였다. 향후 이들 국가에서 양성평등 관련 원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기초 개발수요 파악과 사업 구상에 있어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여성정책, 개발수요, 양성평등, 수요조사

I. 서론

본 연구는 동남아 4개국의 여성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조 수요를 정치, 경제, 인권(폭력)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양성평등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양성평등 분야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중 하나로서 주요하게 다뤄져 왔으며, 협력국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여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2016년 2월 대한민국 개발협력 4대 구상 추진 전략 중의 하나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본 구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국 현지 여성 현황과 현지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력국의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정책수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이 다양한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국가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요인 및 현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범분야 이슈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연구할 수 있겠으나, 보다 심층적인 고찰을 위해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 인권 특히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이나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총 3개 분야별 현지 여성 역량강화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현지 수요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지 여성정책 관련 정치인, 정부 공무원, NGO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요조사,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세미나, 심층면접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 결과를 개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4개 국가의 현지 양성평등 개발수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향후 양성평등 원조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그동안 추진된 4개국별 양성평등 개발수요 파악 방법 및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표 1> 4개국 여성정책 수요발굴 파악 과정 개요⁶⁾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수요조사				
• 추진 방법: 현지 기관 방문 및 설문지 배포				
기간	2011. 5 - 2011. 7	2013. 4 - 2013. 6	2011. 3 - 2011. 5	2013. 4 - 2013. 6
응답자 수	89	114	77	73
사업제안서 발굴				
• 추진 방법: 여성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기간	1차: 2011. 9 2차: 2012. 5 3차: 2014. 9	1차: 2013. 9 2차: 2014. 9	1차: 2011. 9 2차: 2012. 5 3차: 2014. 9	1차: 2013. 9 2차: 2014. 9
참가자 수	1차: 13 2차: 34 3차: 7	1차: 14 2차: 6	1차: 14 2차: 32 3차: 6	1차: 14 2차: 6
정책세미나				
• 추진 방법: 현지 및 한국 정책전문가 분야별 정책공유 발표와 토론				
기간	2011. 8	2013. 7	2011. 8	2013. 9
참가자 수	32	9	46	3
심층면접				
• 추진 방법: 사전교육한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심층면접				
기간	2012. 3 - 2012. 6	2014. 4 - 2014. 6	2012. 3 - 2012. 6	2014. 4 - 2014. 6
대상 수	24	24	21	29
계	199	167	196	125

자료: 김은경 외 (2014) p.112

6) 각 수요발굴 파악과정 별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은경 외 (2014) p.112 본문 및 각주 참조. 또한 본 논문내 제시되는 수요조사, 심층면접 설문 문항 및 응답자 정보는 김은경 외(2011a, 2012, 2013, 2014) 부록 참조.

II. 이론적 배경

본고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한국의 개발협력의 주요 기조가 되는 정책으로 본 장에서는 수원국 중심의 원조에 대한 최근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에 대한 담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MDGs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원조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그간의 공여국 중심으로 수행되던 원조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원조의 중복성, 정책의 분절화, 수원국 거래비용 및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OECD는 2005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준수해야 할 5대 원칙과 12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5대 원칙에는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 개발정책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일치(alignment),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성과중심적인 원조 프로그램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수원국 및 공여국 모두의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이 포함된다. 특히 수원국 주인의식 항목에서는 수원국이 원조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원조일치 항목에서는 공여국이 수원국의 개발정책을 반영한 원조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맞게 원조전략을 조정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29-30).

2. 우리나라의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정책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으로 범정부적 3대 ODA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선진화 전략으로는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국제활동 참여강화가 포함되었다. 특히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에 있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해서 국별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ODA 추진에 기여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수원국 수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의 특성을 살린 개발협력 방안, 특히 한국형 ODA 모델 실시를 기반으로 ‘수원국 맞춤형’ 원조를 강조하고 있다.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기본방향에서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확대’할 것과, 무상원조 분야의 전략목표 5를 통해 파리선언 원칙 이행 노력을 명시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사전조사 및 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은 환경, 여성, 인권, 민주주의를 범분야 이슈로 정의하고,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인권 및 양성평등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수원국 맞춤형’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조의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효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다방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원국의 시각에서 실질적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원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한 원조 배분이 필요하다(최유진, 2012).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원국의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고 수원국을 유형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미래 ODA 배분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유진, 2012: xix).

원조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수원국 중심의 접근방식은 보다 면밀한 개발수요의 파악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동남아 4개국의 양성평등 정책 및 실행 분야에 있어서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할 것이다.

III. 4개국의 분야별 여성정책 수요 분석

1.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가. 인도네시아

2011년 실시한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여성의 참여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정치 분야가 27.68%가 1위를 차지하였고, 동시에 앞으로 여성의 참여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도 정치 분야가 22.56%로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이수연·양인숙·김영혜·윤현주·김정수·강명옥·조세현·조영희, 2011a: 138).

인도네시아는 2009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여성 후보 30% 할당을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며,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본 정책이 여성 국회의원 수 증가에 일정수준 기여했다고 보았다(김은경·이수연·조혜림·윤현주·김정수·박연선·곽서희, 2012: 47).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장애요인이 지적되었으며, 첫째는 바로 사회문화 관습과 성별 고정관념이다(김은경 외, 2012: 47).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주의 원칙에 따라 여성 정치인의 양성에 보수적이며, 여성 후보자는 공천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종교규범이

반영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김은경 외, 2012: 47-48).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활동적일 필요가 없다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여성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3, 여, 39세, 야당 국회의원)

“골카르당 발리지부에 있는 동료들이 말하기를, 가장 힘든 부분이 여성후보를 내세울 때 종교적인 규범과 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4, 여, 54세, 야당 국회의원)

두 번째 장애요인으로서는 정당 공천에 있어서 중시되는 연고주의 및 금권선거 경향이 지적되었는데, 여성이 후보에 적합할지라도 선거운동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다(김은경 외, 2012: 48-49). 마지막 장애요인은 여성 스스로의 성인지의식 또는 역량 부족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특히 여성 의원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으며 여성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충실한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김은경 외, 2012: 49-50).

“정당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의 기준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명성이나 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5, 여, 32, NGO 활동가)

“(여성국회의원들은) 그 수가 적은 것 외에도 소수로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여성 국회의원들이 속한 정당이 다르고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 이슈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이 내는 목소리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여성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5, 여, 32, NGO 활동가)

인도네시아 설문조사에서 여성지위에 대한 질문에 48%가 심각, 35%가 매우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고(김은경 외 2011a: 137), 향후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정당 및 정치(22.5%), 법조계 및 전문직(16.5%) 분야라고 응답이 나와, 여성들의 정치참여나 법조계 진출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현 시점까지 여성정책을 이끌어온 주요 행위자로는 정부와 의회(43.2%), 일반시민(34.5%)을 꼽았고, 향후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되는 행위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와 의회(84.1%)가 압도적인 응답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향후 여성의 세력화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는 여성의 인권에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33.5%), 여성 지도자의 부족(22.7%),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제한적 접근(13.6%)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번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는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치인 그룹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쌓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래에 살펴보게 될 다른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여성단체와 여성정치인들은 그 활동의 성격이 매우 적극적이며 NGOs의 활동도 활발한 편이어서, 인도

네시아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베트남

2013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정책 중 잘 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응답은 6.14%에 머물렀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0.18%로 나타났다(김은경·이수연·장은하·김정수·곽서희·박연선, 2013: 105). 그러나 향후 베트남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당 및 정치인(1.7%)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어, 베트남 여성들 역시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정치참여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2014년 진행된 심층면접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성 고정관념’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여성들은 정치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고, 설령 참여하더라도 일·가정양립이나 사회의 편견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김은경·장은하·김정수·곽서희, 2014: 119-120).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양성평등 관련법과 정책이 비교적 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이를 이행하는 정부부처나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20).

“베트남은 아직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베트남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지도자 자리의 경우, 여전히 사람들은 남성을 선호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사실상 심리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조건입니다. 여성들은 가정살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일을 맡아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베3, 남, 47세, 공기업 관계자)

“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크고 명확한 원인은 각 정부 부처 지도자들의 여성 간부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여성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꺼립니다.” (베5, 여, 52세, 베트남여성연맹 부회장)

“예를 들어, 남존여비와 같은 사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단순히 집 안일만을 담당하고, 바깥일은 신경쓰면 안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로서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 여성들이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베6, 여, 47세, 학계)

제 I 장

제 II 장

섹
터

제 III 장

제 IV 장

“현 13대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이전 12대, 11대 국회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낮은 여성 대표 수치를 보입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각 정부기관들이 여성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인사들이 여성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목표달성 실패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1, 여, 37세, 정부 공무원)

그러나 향후 베트남의 양성평등 실현에 가장 크게 기여할 행위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37.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어, 정부와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요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정부의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공산당 소속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2015년 상반기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여성의원을 35-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산당 내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여성연맹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서 여성정치 역량강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베트남 여성의 정치참여가 크게 증가할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법적으로 남녀 정년퇴직연령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이는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에서는 남녀 정년퇴직연령 차이로 인해 여성의 직무연수 및 승진기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이 의사결정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22).

“진정한 남녀평등은 법을 만들 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즉 노동법을 만들 때, 우대사항을 만들기 전에 일단 남녀의 노동은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의 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성 간부 임명, 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 없이 훌륭한 여성을 선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베2, 여, 62세, 현 국회의원)

다. 캄보디아

2011년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가 가장 잘 안되어야 있는 분야에 대해, 농어촌여성 지원분야(22.5%)에 이어 여성의 정치참여가 20%로 2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0).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된 분야에 대해서 교육서비스분야(19.6%)에

7) 김은경·곽서희. 2014. “베트남 정년퇴직연령의 성차(Gender Gap)와 성별노동분업의 제도화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참조.

이어 정당 및 정치(16.1%)가 2순위로 응답이 되고 있어서(김은경 외, 2011a: 138), 캄보디아 여성들이 인식하기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의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심층면접에서는 응답자가 정부, 혹은 시민사회나 학계에 소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소 응답에 차이가 존재했으나 전반적인 장애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24).

첫째, 여성 후보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관념이 강하다보니,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사회적 관념을 의미한다(김은경 외, 2012: 41-42).

둘째, 금권선거 관행이다. 이는 정치가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선입견과 맞물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김은경 외, 2012: 43).

“정당이 공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 후보자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실질적인 요인은 돈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면 의회 단위라 해도 돈이 없으면 선거 후보자에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캄1, 여, 31, NGO 활동가)

“여성은 능력과 돈, 두 가지 다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은 돈이 있는 자들을 우선시하고, 돈이 있는 자들은 정당을 돕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정당은 이 사람이 정당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며 승진조치를 시킵니다. 여성의 경우, 능력은 있지만 정당지원비가 없어서 정당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캄2, 여, 27, NGO 활동가)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 및 후보 스스로의 역량 문제이다. 여성들이 정치 참여하는데 있어 가정과 일터 모두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정치 참여가 부담이 되고, 가족의 지원 없이는 후보자 등록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김은경 외, 2012: 43-44).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들은 후보자의 가정이 행복한지, 어떻게 사는지, 남편과 화목한지 추궁한다. 때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요구되는 점들의 차이가 여성들에게는 부담으로 안겨진다. 이는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면 그 여성은 일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캄1, 여, 31, NGO 활동가)

이같은 장애요인은 비단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니며,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과제는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캄보디아도 역시 향후 양성평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행위자에 대해 정부와 의회(68.2%)라는 응답(김은경 외, 2011a: 144)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책결정자에 대한 기대를 역시

제 I 장

제 II 장

섹터

제 III 장

제 IV 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미얀마

2013년 수요조사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73.97%로 여성의 정치 분야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얀마 여성들의 정치 분야 참여의 현 주소가 열악하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3: 99-100). 더불어 미얀마의 여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분야 9가지 중 여성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응답자는 6.85%로 5위에 그친 반면,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응답자는 13.7%로 2위로 나타나고 있어서(김은경 외, 2013: 105), 미얀마 역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짐작된다.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주요 행위자에 대해, 여성 NGOs(24.6%), 국제기구(13.7%)의 순으로 응답이 되었고, 향후에 주요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부(16.4%), 의회(13.7%), 국제기구(12.3%)로 응답이 되어, 미얀마의 정치기회구조 변화를 응답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즉 군부독재 정치구조 하에서 NGO와 국제기구에 의존했다면, 전문가들은 이제 새로운 정치경제 구조 하에서 정부와 의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2014년 실시한 심층면접에 따르면, 미얀마는 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군부정권 시기의 남성중심 문화가 잔존해 있고, 이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정치 분야에서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가 싹틔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다(김은경 외, 2014: 128-129).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현재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군부정권 때는 여성 정치 관련 규정이 원래 없었기도 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선시 했습니다. 젠더라는 개념도 최근에 들어서야 들리는 것입니다.” (미8, 여, 46, NGO 활동가)

이와 더불어, 미얀마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 관습에 따른 성 역할이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29).

“여성이 의원 활동을 하더라도 재당선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바깥에서 여성들이 일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집안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역할이 큼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능력과 시간 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3, 남, 35, 정부 공무원)

“유권자들이 남성을 여성보다 선호하는 경향은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더 무게를 두는 오래된 편견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의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5, 여, 44, 여당 국회의원)

이상의 4개국에 대한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미얀마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베트남은 1정당 체제 하에서 직능대표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명목상의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후보 공천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미얀마(6.2%)를 제외하고 3개 국가 모두 20%를 상회하는 비율이어서(인도네시아 17.1%, 캄보디아 20.3%, 베트남 24.3%),⁸⁾ 숫적인 측면의 대표성은 한국보다 우월한 편이지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측면에서 여성친화적 대표 발의나 입법활동은 현재까지 조사된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의원들이 수적인 대표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지도자의 역할, 의정활동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

가. 인도네시아

2011년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13%의 응답자가 농어촌 여성 이슈(3위)를, 약 8%의 응답자가 여성고용 및 창업 이슈(6위 응답)를 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1a: 145-146). 반면,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약 31%)에 이어 여성고용 및 창업(22.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1a: 140; 김은경 외 2014: 131). 즉,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정책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반면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위한 현 제도적 인프라의 부족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4: 131).

2012년도에 실시된 심층면접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 결탁으로 인해 여성노동자 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 바

8) <http://www.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5. 10. 21. 3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가장 최근의 총선결과로, 인도네시아는 2014년, 캄보디아는 2013년, 베트남은 2011년 총선 결과임.

있다(김은경 외, 2012: 58; 김은경 외, 2014: 132). 한편, 기존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의 내용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역에 치우쳐져 있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군에 대한 경제역량 강화의 필요성 역시 시사된다(김은경 외, 2012: 255-256; 김은경 외, 2014: 132).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제 분야 참여에 있어 가장 주된 장애 요인은 단연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가장이 아니므로 굳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승진이 어렵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가내수공업 등의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2: 60-61). 특히, 정부의 지원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소규모 가내수공업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 또는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은경 외, 2012: 60-61).

나아가 여성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여성이 신용 대출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김은경 외, 2011a: 136-137).

나. 베트남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잘 되어 있는 여성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 설치(26.3%)에 이어 여성의 경제참여 분야(21.9%)가 2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3: 105). 그리고 잘 안되어 있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참여는 5.26%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김은경 외, 2013: 105). 즉, 베트남 현지의 정책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참여 분야의 정책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베트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체 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3: 68).

그러나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 정년연령의 차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비공식 경제부문의 종사 등은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김은경 외, 2013: 68-69). 그 중에서도, 여성 경제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베트남 역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을 꼽을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은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에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역량이 낮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 기업인의 능력을 신뢰하는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김은경 외, 2013: 140).

실제로 2014년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응답자 대부분 역시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을 꼽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가 ‘가족’과 ‘가정’으로,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정 내 성역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김은경 외, 2014: 142).

“(자신의 사업 운영에 있어) 남성은 여성과 다릅니다. 남성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그것이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성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성과 비교해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베13, 여성, 연령, 정당인)

“베트남 여성들은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많이 남는 교사나 사무직 등의 일들을 선호합니다. (중략) 남편들도 아내가 이러한 직업들을 갖는 것을 선호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교사, 공무원, 연구원 등을 (직업으로 갖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여 남는 시간에는 자식들을 돌보지요. 여타 경제적인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고요.” (베15, 남성, 38세, NGO)

다. 캄보디아

2011년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교육기회의 부족(21%)이 가장 많은 응답인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23%) 다음으로 현지의 여성지위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여성(26%)과 여성의 취업 및 창업(13%)이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즉,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농촌지역 여성과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1a: 140; 김은경 외, 2014: 144-146). 심층면접에서는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에도 드러난 것처럼, 성 차별적 문화와 관습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여성들의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여성의 경제 역할을 가사노동으로 국한시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이 고용시장에서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56-57).

“남편들은 (직업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가서 뭐 할 거냐. 집에서 밥이나 지어라.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캄 11, 남, 32, NGO 활동가)

“캄보디아에서 여성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은 학사학위입니다. 만약 대졸 학력 여성이 적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캄 12, 여성, 50, NGO 활동)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낮은 취업 연계 가능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55). 대개의 여성대상 직업훈련의 경우,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기술만을 제공하는데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업교육 커리큘럼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성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직종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2: 55).

그리고 위 주요 장애요인들 외에도 여성의 출산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농촌지역 여성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경제적 자원への 접근 기회 부족, 가정의 경제 및 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한 등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1a: 137; 김은경·윤현주·김정수, 2011b: 171-172).

라. 미얀마

2013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정책전문가들은 정책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분야로서 여성을 위한 교육기회(19%)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반면 정책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참여라는 응답이 1%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미얀마가 다른 주변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여성의 교육율과 문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75%)가 이루지고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UNDP, 2013; 김은경 외, 2013: 217; 김은경 외, 2014: 1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미얀마의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과 장애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특징으로서, 미얀마 여성들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창업보다는 고용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업 및 소규모 자영업과 같은 비공식 분야에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다(김은경 외, 2014: 146-148).

미얀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된 장애요인으로서는, 첫째, 성차별적인 사회문화 및 관습, 둘째,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호(특히,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부족의 문제가 심층면접을 통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49-152). 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의식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여성들 스스로가 성 역할고정관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김은경 외, 2014: 151).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만 있는 백수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습니다. (중략) (많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돈이 없어도 졸업 후에 집에만 있습니다.

여성이 바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14, 여성, 40세, NGO)

“여성이 지시한다는 것은 항상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말 중의 하나가 남성들을 누르는 말이 되지 않는지, 내 자신이 소수종족이기에 그냥 말한 것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같은 것에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식(의 개선)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17, 여성, 47세, NGO)

“민간부문에서 일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도 관리직이 될 때까지 외국회사에서 근무했는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벽과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중략)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의 역할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고, 여성이 더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남성의 발언과 여성의 발언에 대해 가끔 그 자신감이나 신뢰도에 있어서 아직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사회적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별에 따른 수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미15, 여성, 40세, NGO)

또한, 미얀마의 은행시스템 또는 교통시스템 또는 기술 부재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경제참여에 관련된 정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4: 152). 한편,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의 농사를 돕거나, 농산품 및 축산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경제참여에 있어 더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4: 152).

“(여성사업자들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들의) 시장접근을 돕고 사업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된 (사업) 파트너와 투자자와 함께 이들의 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15, 여성, 40세, NGO)

“미얀마의 농수산업은 아직 1차 생산품 정도만 생산 가능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료를 외국에 수출한 뒤 다시 역수입되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수준이라서 (여성들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모여서 일할 지라도) 이익이 생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미18, 여성, 48세, NGO 활동가)

“양곤에서만 하고 있는 활동들이 시골에서도 진짜 필요합니다. (중략) 시골지역의 개인사업주를 위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경험공유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농촌지역 여성들의 자신감이 올라가면 그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미14, 여성, 40세, NGO)

3. 여성의 인권 (폭력철폐 및 방지)

가. 인도네시아

2011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중 가장 잘 안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가 31.73%로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0). 양성평등 법제도화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27.6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김은경 외, 2011a: 146), 법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분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25%)가 꼽혔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 1순위로 정부 및 의회(43%), 다음으로는 여성 NGO(30%)가 꼽혔다(김은경 외, 2011a: 144). 향후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주체 1순위로는 정부 및 의회(84%), 2순위로는 일반 시민 (48%)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44).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내 여성인권 및 여성대상 폭력 문제가 정책적인 면과 법제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 시민, NGO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2011년 실시한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인도네시아 여성대상 폭력 관련 정책 문제의 심각성이 파악된 바 있다. 참석한 현지 전문가들은 여성대상 폭력피해자 지원센터 부족, 운영예산이나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 부족, 지방자치단체가 ‘샤리아법 (이슬람 기본법)’⁹⁾에 따라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종교적, 관행적 폭력의 만연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52). 2012년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또한 응답자들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가부장적이며 또한 반여성적임을 역설하였고, 특히 ‘잘못된 종교적 해석으로 인해 폭력을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김은경 외, 2012: 77).

여성폭력철폐가 미진한 원인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존재하긴 하나, 경찰이나 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협력 수준이 미비함이 지적되었고, NGO 차원에서 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국토의 광대성 및 확산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52). 또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 및 관습이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일’이며 범죄로 여기지 않는 대중의 인식을 만들어 내는 문화도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폭력 희생자를 오히려 문제 제공자로 간주하며 불명예스럽게 여김으로써 재피해를 발생하게 한다(김은경 외, 2012: 77).

“문제는 사회 내에서 성폭력은 종종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중략)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성폭력 희생자를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합

9) 샤리아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고 머리를 가려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니다.” (인19, 여성, 33세, NGO 활동가)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종교적으로 이를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범죄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습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중략)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습과 종교를 해석하는 사고와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 때문입니다.” (인20, 여, 43세, 학계)

아울러 지역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역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기관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소홀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77).

나. 베트남

2013년 수요조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열악한 분야로 여성인권이 72.81%로 1위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00). 또한 미흡한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도 인권 및 폭력 철폐가 22.81%로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3: 105). 이러한 높은 수치는 현재 베트남에서는 여성 인권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김은경 외, 2014: 158). 2013년 수요조사에서는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정부(37%)와 국제기구(24%)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1). 향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정부(18%), 일반시민(18%) 여성 NGO(15%) 순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1). 이는 현재까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향후에는 정부, 시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주체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여성 대상 폭력철폐 주요 장애요인으로서는 먼저 법률의 부재를 언급할 수 있다. 2014년 실시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철폐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가정폭력 이외의 여성폭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김은경 외, 2014: 160-161).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방지 및 철폐법의 경우, 거의 모든 심층면접 응답자가 법 자체는 이미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행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였다(김은경 외, 2014: 161).

제 I 장

제 II 장

섹
터

제 III 장

제 IV 장

“제가 생각하기엔 (가정폭력 관련) 정책을 추가로 더 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실제에 적용하여 실생활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매 기간마다 법의 미흡여부를 평가하여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둘째, (법실행을) 함께 검토하면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활동 내역 및 임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베17, 여, 44세, 고위공무원)

또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비한 것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61).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여성폭력문제를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또한 폭력의 희생자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여성폭력문제에만 집중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장애물이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베23, 여, 41세, 국제기구 직원).

다. 캄보디아

2011년 수요조사 결과,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가 1위(30.3%), 그리고 정책의 성주류화가 2위(15.8%)를 기록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0). 이와 동시에, 정책 인프라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성대상 폭력 관련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이 15.85%로 여성의 교육참여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0). 캄보디아에서는 여성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있는 등 폭력근절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52).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정부 및 의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73%)와 다음으로는 여성NGO(11%)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1). 향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정부 및 의회(68%), 학계 및 지식인 계층(35%) 그리고 여성 NGO(31%)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1). 이러한 응답으로 볼 때,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높긴 하나, 향후에는 지식인 계층과 시민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여성인권증진 및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있어서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차밥 쓰레이(Chbap Srey)’¹⁰⁾와 남성 중심적인 문화, 폭력에

10) 차밥 쓰레이는 캄보디아 전통적인 규범으로, 여성이 뛰어다니거나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한 인식 및 수용적 태도, 장애인 등 소외 여성이 겪는 차별, 빈곤, 부정비리, 금권남용, 그리고 실효성 없는 법과 정책이행 문제를 제시하였다(김은경 외, 2012: 66).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2012년 심층면접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인적역량강화, 폭력/차별에 대한 처벌 및 방지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김은경 외, 2012: 70).

라. 미안마

2013년 실시한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전문가들은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로 정치(74%) 다음으로 인권 및 폭력(66%) 분야를 선택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분야로도 여성 인권 및 폭력 철폐 분야가 31.51%로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3: 119).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미안마는 여성 NGO(27%)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국제기구(14%)와 외국정부(11%) 순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1). 이러한 응답은 과거 군부정권이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양성평등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정부의 부재는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NGO들이 대신하였음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16%), 국회(14%), 최고정책결정권자(12%) 국제기구(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향후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현과 관련하여 정부, 시민사회, 개인, 국제단체 등의 고른 공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은경 외, 2014: 168).

2014년 심층면접에 의하면, 여성인권 증진 및 폭력 철폐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관련 법규 미비가 지적되었다. 또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거나, 실제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아직 미안마에는 가정폭력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여러 응답자로 부터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70). 아울러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들은 젠더적 관점이나 국제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무료법률서비스나 피해자 보호 체계도 미흡하다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4: 170).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할 때, 위와 같은 장애요인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우선 예산 및 인력 부족, 정책결정자들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관련 이슈가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점, 전반적인 법제도 이행에 있어 필요한 성인지적 관점 인식 부족 등을

말하며, 온화하고 인내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경 외 (2011b), p.16 참조.

지적하였다(김은경 외, 2014: 170).

4. 4개국의 여성정책 수요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각 국의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전반적인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으로 ‘차별적 문화 및 관습’이 4개국 모두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약 83%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이를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와 관습이 여성지위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김은경 외, 2013: 116). 또 다른 여성지위향상 장애 요인으로서는 정치적 참여기회 부족과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대체로 각 국가마다 2, 3위 선상에 분포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116).

〈표 2〉 4개국별 여성지위 향상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1위	2위	3위
캄보디아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 (22.64%)	교육기회의 부족 (21.38%)	정치적 참여기회 부족 (13.84%)
인도네시아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 (33.52%)	여성정책 리더(인적 자원)의 부족 (22.73%)	경제적 자원에서의 접근기회 부족 (13.64%)
미얀마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 (56.16 %)	제도 및 법률의 부족 (54.79%)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 (39.73%)
베트남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 (83.33%)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 (55.26%)	정치적 참여기회 부족 (43.86 %)

출처: 김은경 외 (2013) p.117

4개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또 하나의 유사한 점은,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잘되어 있는 분야에서 바로 ‘여성의 교육기회 보장’분야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1위로 선택되었다는 점이다(김은경 외, 2013: 118).

〈표 3〉 4개국별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분야 (단위: %, 중복응답)

	1위	2위	3위
캄보디아	여성교육기회 보장 (30.49%)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 (15.85%)	정책의 성 주류화 (13.41%)
인도네시아	여성교육기회 보장 (31.11%)	국가기구 설치 (27.78%)	여성의 정치참여 (21.11%)
미얀마	여성교육기회 보장 (19.18%)	국가기구 설치 (12.33%)	정책의 성 주류화 (9.59%)
베트남	국가기구 설치 (26.32%)	여성의 경제참여 (21.93%)	여성교육기회 보장 (21.05%)

출처: 김은경 외 (2013) p.118

반면,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는 캄보디아를 제외한 3개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 및 여성대상 폭력 철폐’가 1위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 국가에서 2위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9).

〈표 4〉 4개국별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는 분야 (단위: %, 중복응답)

	1위	2위	3위
캄보디아	농어촌여성 (22.5%)	여성정치참여 (20.0%)	정책의 성 주류화 및 여성보건 (11.25%)
인도네시아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 (31.37%)	여성고용 및 창업 (22.55%)	여성보건 (12.75%)
미얀마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 (31.51%)	여성정치참여 (13.70%)	국가기구설치 (13.70%)
베트남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 (22.81%)	여성정치참여 (20.18%)	정책의 성 주류화 (17.54%)

출처: 김은경 외 (2013) p. 119

위와 같이 연구대상 4개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분야, 또는 아직 미흡한 분야에 있어 4개국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분야별 응답 비중, 1-3위 선택에 있어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여성정책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성평등 원조 사업안을 발굴 및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I 장

제 II 장

섹터

제 III 장

제 IV 장

Ⅳ. 4개국의 양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의 공유

본장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개 협력국 여성전문가들이 작성한 양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예시적 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사업들은 현지의 양성평등 전문가(공무원, 학자, 시민사회 리더 등)들이 파악한 현지의 수요에 기반한 제안서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 국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① 풀뿌리 차원에서의 여성 정치참여 강화, ② 총선 대비 여성후보 진출을 위한 캠페인 전략 수립 등의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경제 분야의 경우 ① 농촌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한 빈퇴치, ② 여성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경영인 지원 사업, ③ 공공인프라 개발계획에서 성인지적 인프라 모델 개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인권 및 폭력분야에 있어서는 ① 성폭력 감소를 위한 시스템 활성화 방안, ②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법 제정, ③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거버넌스 제도화 사업, ④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법집행 강화 사업, ⑤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정책 강화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김은경 외, 2014: 213-220).

베트남의 경우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① 공공분야 내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공적 리더십 강화사업, ② 국가운영에 있어서 여성 리더 증대를 위한 성인지 예산 사업, ③ 은퇴연령 관련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정, ④ 양성평등 관련 법, 정책 수립 및 이행 개선을 위한 성인지 예산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경제 분야의 경우 ① 도농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사회적 보호 강화 사업, ② 여성의 토지사용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 사업, ③ 베트남 내 가사노동자 관련 정책의 성주류화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인권 및 폭력분야에 있어서는 ① 도시지역 청소년 데이트에 있어서의 젠더기반 폭력 예방 사업, ② 여성 보건 관련 국가 역량구축 사업, ③ 여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개선 사업 3)가정폭력 예방 관련 행동변화 프로그램, ④ 가정폭력 방지 및 철폐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부 메커니즘 강화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김은경 외, 2014: 220-228).

캄보디아의 경우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① 지역구에서의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강화, ② 여성 국회의원 및 여성의원 후보의 역량강화 사업, ③ 지방의회 여성의원 역량강화 사업, ④ 정부 공직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증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① 여성개발센터 민관협력 파트너십, ② 여성 직업능력센터, ③ 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여성 역량강화 사업, ④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여성부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인권 및 폭력분야

에 있어서는 ① 법적기소를 통한 성범죄처벌강화방안, ②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방법집행관/정부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③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이 제시되었다(김은경 외, 2014: 228-235).

미얀마의 경우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① 소수민족 정치역량 구축 사업, ② 미얀마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및 젠더 정의 사업, ③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구축, 정치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경제 분야의 경우 ①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한 여성들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사업, ②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한 기초연구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인권 및 폭력분야에 있어서는 ①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공동체 인식제고 및 사법 접근권 개선 사업, ② HIV/AIDS 관련 법정책 개혁 검토 사업, ③ 여성보건센터 설립, ④ 지역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교육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김은경 외, 2014: 235-241).

제 I 장

제 II 장

섹터

제 III 장

제 IV 장

V. 시사점 및 결론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의 양성평등 현황과 수요에 대해 분석하고, 이 수요에 기반한 양성평등 사업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 4개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3개국은 현재 한국의 유·무상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수립되어 있다. 미얀마의 경우 2015년 3월 열린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4개의 제2차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CPS는 수립되지 않았다. 미얀마를 제외한 3개국의 CPS에서는 범분야로서의 양성평등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본고에서 제시한 현지 수요와 부합하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CPS에서는 여성의 정치, 경제분야의 참여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모성사망율과 지역간 모자보건 서비스 격차도 언급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김은경 외, 2014: 187에서 재인용). 프로그램 형성 단계에서부터 양성평등 가치를 사업 수립, 이행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지원, 모자보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52; 김은경 외, 2014: 17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를 위한 현지 수요와 가능한 사업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CPS와 점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원조사업으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한다면 현지 수요에도 부합하고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CPS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경 외, 2014: 187).

베트남 CPS에서는 양성평등 현황과 문제점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양성평등 분야의 문제점으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현대사회의 흐름사이에 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공식분야의 여성 차별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4; 김은경 외, 2014: 177에서 재인용). 이는 본고에서도 지적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라는 장애물을 CPS에서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김은경 외, 2014: 187). 또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차별, 토지소유권에 있어서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 점(관계부처 합동, 2011: 14; 김은경 외, 2014: 177에서 재인용) 또한 본고에서 분석하고 제안한 사업 분야와 일치한다. 아울러 베트남 CPS는 특히 소수민족이나 산간지역, 빈곤층, 농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35; 김은경 외, 2014: 177에서 재인용).

캄보디아의 CPS에서는 성차별적 관습을 양성평등의 주요 방해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명시하고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2b: 18; 김은경 외, 2014: 182에서 재인용) 이는 본고의 수요파악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캄보디아 CPS에서는 농산물 교역과 중소기업 활동에 있어서 여성역량강화와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개발수요를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44, 57, 62; 김은경 외, 2014: 182에서 재인용). 캄보디아 CPS ‘범분야 지원계획’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 여성참여 비율 보장, 여성자치조직형성을 제안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64; 김은경 외, 2014: 183에서 재인용). 보건, 농업개발, 인적자원개발에서도 성주류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64; 김은경 외, 2014: 183에서 재인용).

아직 CPS가 수립되지 않은 미얀마의 경우 양성평등 현황과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미얀마 대상 원조사업 기획 및 추진 시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CPS 상에서 위 4개 국가의 여성지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되고 있으며 성 차별적 관습으로 인한 낮은 여성 지위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의 양성평등의 현실에 대해 CPS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요소가 적극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발굴의 단계에서 수원국의 수요라는 부분이 젠더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차별적이고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이들 국가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제안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협력국의 낮은 여성 지위에 대해 문제인식

을 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실행력과 책무는 개도국에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도국에서 젠더사업의 수요를 제안하지 않는 한, 한국은 개도국의 성평등을 위해 액션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3조 1항에서도 한국의 원조는 성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CPS를 비롯한 주요 정부 문서 역시 양성평등에 대한 항목을 개설하여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젠더 사업에 있어서 정책 뿐 아니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으로 개도국과 소통하는 공여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제 I 장

제 II 장

섹
터

제 III 장

제 IV 장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1.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베트남”.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2a.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인도네시아”.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2b.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캄보디아”.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은경 · 이수연 · 양인숙 · 김영혜 · 윤현주 · 김정수 · 강명옥 · 조세현 · 조영희. 2011a.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정책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 모듈개발”. 연구보고서 23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윤현주 · 김정수. 2011b.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23-1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이수연 · 조혜림 · 윤현주 · 김정수 · 박연선 · 광서희. 2012. “아태지역 양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 연구보고서 10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이수연 · 장은하 · 김정수 · 광서희 · 박연선. 2013. “아태지역 양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연구보고서8 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장은하 · 김정수 · 광서희. 2014.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V):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연구보고서 19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광서희. 2014. “베트남 청년퇴직연령의 성차(Gender Gap)와 성별노동분업의 제도화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 장은하 · 광서희 · 김경주 · 구영은. 2013. “미얀마·베트남 젠더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8-2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유진. 2012. “원조 수원국 특성에 따른 ODA 지원 전략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43호.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일반교육 - 중급과정』. 성남: KOICA ODA 교육원

- Morgan, P. 2002. "Technical Assistance: Correcting the Precedents." *Development Policy Journal* vol.2
- OECD. 2011.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utcome Document of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UNDP. 2002. *Capacity for Development: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New York: Earthscan Publications Ltd
- _____. 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available at http://www.undp.org/content/dam/aplaws/publication/en/publications/capacity-development/capacity-development-practice-note/PN_Capacity_Development.pdf (접속일: 2015.10.02)
- _____.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 World Bank. 2010. "Scaling Up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A Working Paper for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illar 9", available at <http://www.oecd.org/g20/meetings/cannes/Scaling-Up-Knowledge-sharing-for-Development.pdf> (접속일: 2015.10.02)

제 I 장

제 II 장

섹
터

제 III 장

제 IV 장